

조선업 구조조정, 민영화, 성과연봉제...

박근혜의
노동자 책임 전가에 맞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라

노동계약 폐기, 최저임금 1만 원, 법정노동시간 단축

교사 ·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책임 전면화

▶ 관련 기사 3, 4, 5, 10, 16 면

다음 호는 7월 16일에 발행됩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
의미와 전망

6~7 면

세월호 침몰
미국 제국주의와도
관련 있다

8~9 면

남성이 여성차별로
이득을 보는가

14~15 면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11 면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위험한 제국주의자

12 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가 대안이다

13 면

누구의 말일까요?

“저 살인매[올랜드 대학살 범인]가 왜 이 땅에 사나? 미국이 애초에 그 부모를, 가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극단적인 사상 자체는 서구의 가치, 제도와 근본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의
무슬림혐오

“나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라를 이끌 선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영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사퇴 발표.
영국의 오세훈?

“90세가 되고도 노후가 걱정된다는 등의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언제까지 살아 있을 생각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봤다.”

“내 할머니는 저축은 전혀 하지 않았다. 돈은 아들과 손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했다.”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 다로,
‘아소 시멘트’ 사장 집안의 여유

“콩 한쪽도 나눠먹으려 그런 우리 선조들. 우리 백의민족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심성. 이거를 살리는 그 한국에 가면 참 친절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남더라. 그것도 큰 텐츠다.”

박근혜, 또 번역기를 돌려야 할 때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 돼서”

2015년 기획재정부가 밝힌 특조위에
예산 미지급 이유, 이래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 시작이라고?

“창문마다 온 힘을 다해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고, 방 사이를 가로막은 칸막이벽들이 주먹으로 쳐서 다 부서졌어요. 물 속에서 마음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세월호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 유충렬 씨.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보상도 하지 않는다

“병원에 있을 때, 애들이랑 내가 숨바꼭질을 해요. 꿈속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에 나섰던 고(故) 김관홍
잠수사, 누구보다 진실 규명을 바라던
그는 결국 눈을 감았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스페인 총선 결과

기대를 모았던 급진좌파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다

★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강충강충에 대한 박해 중단하라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반대한다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44억 원의 사용처 정보도 밝히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 44억 원 예산의 용도를 밝히지 않으려고 세금으로 변호사를 5명이나 사서 여덟 달을 버텼지만, 결국 44억 원 중 25억 원을 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문서에는 국정화 반대 여론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부르고 이를 잠재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렇게 홍보 예산을 세금에서 갓다 썼어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노동개약,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보육 예산 사태 등과 겹쳐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한 이유가 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뜻한다는 점, 이는 교육 내용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평범한 사람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정화 강행 당시, 박근혜는 친일이나 독재 미화 같은 건 있을 리 없다고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랬다면 굳이 기존의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화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우익적 역사 왜곡과 재해석은 단지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박정희를 미화하려는 의도(“효도”)에서 한 일만은 아니다. 한국 지배자들의 독재, 친일, 부패, 착취 경력을 은폐·미화해 한국 자본주의



공국으로는 자유발행제로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역사서들도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한다.

의 정당성을 재확립하려는 것이다. 즉, 1987년 민주화 과정 시작 이후 학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현 주류 지배자들의 과거(실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가 부정적으로 다뤄진 것을 되돌리려는 의도다. 어느 정도는 경제 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한국 지배자들의 자부심도 반영됐을 것이다. 전 경련은 뉴라이트 등장 전부터 교과서 전반이 기업과 기업주들, 자유시장 체제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꾸려고 애를 써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안보 위기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과거 냉전을 배경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벌였던 일, 즉 노동계급을 억눌러 쥐어짚던 일을 (1백 퍼센트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되풀이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독재와 착취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오늘날의 반동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박근혜에게는 선거 참패 때문에 포기하기엔 더 장기적이고 중요

한 일들이 교과서 국정화의 배후에 있다. 따라서 “국정화 재검토를 협치의 시금석으로 삼자”(참여연대)는 일각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오히려 총선 참패의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려고 구조조정 공세를 펴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등 안간힘을 써 왔다.

그럼에도 대중적 반감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슬금슬금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여전히 정권에 불리한 요인이다. 물렁한 야당들도 여소야대 구도를 만든 대중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대선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좋은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사회운동의 대응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대형 집회들을 보면, 주최 측 예상보다 참가자도 많고 분위기도 밝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총선 직전에 온라인 설문과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해 최근 발표한 “20대 국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10대 과제”의 두 번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다.(첫 번째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다.)

국회를 무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리는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역사 교육에 국가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체제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현존 계급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므로,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제 저지에서 더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통해 다양한 역사 해석들이 교육에 반영돼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유물론에 입각한 훌륭한 역사서들이 늘어나고 교과서로 채택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노동계급의 정치의식 함양에 훨씬 이롭다.

김문성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정부의 집회 탄압에도 멈추지 않다

노동자 파업 확대가 중요하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급기야 6월 23일과 28일로 예정된 노동조합 집회를 금지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에도 노동자 파업이 끊어지지 않고, 14일에는 파리에 1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자 무리수를 둔 듯하다.

프랑스에서 노조 집회가 금지된 것은 1962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는 즉각 분노와 항의에 부딪혔다. “집회 금지 조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온라인 서명에 순식간에 12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저명한 좌파 학자들도 정부의 조처를 비판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정부는 물러섰다.

그래서 23일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파리에서는 노조 추산으로 6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도 뚫고 집회와 행진이 벌어지는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전진시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날치기’로 하원을 통과한 노동법 개악안은 상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상원이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원으로 돌려보내게 하려면 의회 바깥의 압력이 더 커져야 한다. 핵심은 노동자 파업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투쟁의 선봉장 구실을 하던 정유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접는 등 일부 부문의 파업이 끝나면서, 파업을 유



6월 23일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

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파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유로2016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며 정부와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연금개악 반대 투쟁의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당시의 투쟁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는데도, 파업이 일부 부문에만 머무르고 더 확산되지 않으면서 패배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발휘되려면 지도자들이 투쟁 확대에 나서도록 할 아래로부터의 독립적 압력이 필요하다.

차승일



6월 8일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에 모인 조선업 노동자들.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박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보도 직후 박근혜가 던진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다.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인 다수가 복지삭감, 실업, 해고 등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에 정면 도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 세계 자본가들이 충격에 휩싸여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박근혜는 이것을 계기로 구조조정을 더한층 압박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언론들도 앞다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 선주들에 발주를 의존하고 있는 조선·해운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꼽혔다. 브렉시트가 다른 나라들의 유럽연합 탈퇴 도미노를 부를 수 있고, “보호무역 확

산의 불씨”가 돼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의 왜곡과 달리,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찍은 노동계급 대중은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다. 더구나 박근혜를 비롯한 전 세계 지배자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한다. 극우정당(영국독립당)과 보수당의 주요 인사들이 탈퇴파의 한 축을 형성했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선부르다.

물론 조선·해운업의 수주 물량 회복을 기대하는 것도 지나친 낙관일 것이다. 오히려 저성장이 지속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더라도) 경제 위기 자체로 국제 교역량이 줄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 위기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

로 2009년 전 세계 무역량을 12.3퍼센트 끌어내렸다. 조선·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아 한국에서도 수주 절벽이 생겨났다. 그 후폭풍으로 중소기업도 조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 뒤로 국제 교역량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012~15년 국제 교역량 증가는 2~3퍼센트대로 매우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금리 인상 등까지 벌어진다면 200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지배자들의 걱정은 여기서 비롯한다. 조선업체들이 공장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고용·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동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지배자들의 심산이다.

노동운동 내 일부는 구조조정이 ‘조선 패배 이후 노동개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박근혜의 노림수’라며 이

문제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노동개악 추진의 동력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부는 구조조정이 현대중공업 정기선 같은 ‘재벌 3세의 경영 세습을 위한 길 닦기’라는 주장도 한다. 사용자들이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이럴 때조차 진정한 목적이 구조조정 자체가 아니라고 여기면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진보진영의 일부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강조점을 두기보다 재벌 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그런 위험을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구조조정은 사활적 과제다. 저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확실하게 떠넘겨 기업주와 채권단을 살리려고 필사적이다. 그만큼 실질적인 투쟁을 건설해 맞서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부실·비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기업의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던 정부가 도리어 부실·비리의 주범이었다. 정부 소유 기업인 대우조선의 전 사장 고재호는 5조 4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 다른 전 사장 남상태는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1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경영진은 부패의 과실을 함께 누렸다. 산업은행은 퇴직한 임원들을 대우조선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보내, 부실을 방치하고 대주주로서 이익을 챙겼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실·부패의 총체적 책임자인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은 ‘혁신’ 대상에서 쏙 빠졌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이 모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말이다. 청와대가 분식회

계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두 차례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돼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못했을 뿐이다.

이는 일각의 주장처럼 대우조선이 “주인 없는 기업”이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자본주의 체제에 깊이 아로새겨진 어두운 그림자다.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부정 축재를 일삼고 끝없는 이윤 경쟁 속에서 정관계 로비에 힘쓴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지난 한 해 알려진 비리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정몽준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 ‘항제 골프·성접대’ 파문, 산업재해 은폐와 뇌물수수, 납품비리 등등. 정몽준은 추악하게 축재한 부를 물려주려고 아들 정기선을 초고속 승진시키기도 했

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부실·비리 경영의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진정으로 부정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의 책임을 물으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일단 정부·여당은 정의당·더민주당·국민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관한 청문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져 자칫 구조조정 추진에 차질을 빚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우조선·삼성중공업노조 지도부가 노동부 장관 이기권과 만남을 가진 것은 부적절했다. 정의 찬반투표까지 해 놓고 “노사정 대화”를 촉구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지도부의 투쟁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주요 노조 지도자들은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청문회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해 볼 만하다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기대서는 진정한 책임 추궁과 구조조정 중단을 강제하기 어렵다. 두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생·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려고 애쓰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우그룹 부도를 내놓고 공적자금 20조 원을 ‘먹튀’한 김우중을 봐준 전력도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생산관계 상에서 진정한 힘을 보여 줄 때 이런 야당들에게도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 파업 결의 “분사화·임금삭감·비정규직해고 중단하라”

최근 조선업 노조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저지 파업을 결의하고 나서자,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지키기 파업 용납 못한다”고 으름장을 놔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기득권”을 쥔 이들의 폐쓰기가 아니다. 조선업 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수조 원의 분식회계와 비리를 일삼고, 단기적 이윤에 눈 멀어 저가 수주에 열을 올리고, 해양플랜트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도 모두 이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 반대가 경제를 더한층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것이 ‘서민경제 살리기’이자 ‘생존권 사수’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지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결코 위기에서 경제를 구출해 내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은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고통전가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조선·해운업에서 구조조정을 관철해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개악을 확대하려 한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움에 나선다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조선업체들의 자구안은 실로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분사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조치로 고용을 위협한다. 또한 사측은 고정연장수당 폐지 등 20~30퍼센트가량의 임금 삭감도 노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금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1만 1천3백여 명이 해고됐다. 매월 평균 6백27명 꼴이다.

따라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는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를 등에 업은 사측이 강력하게 공격에 나서는 만큼,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파업 전이라도 분사화와 고정연장수당 폐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공격 시점을 볼 때 7월 중순경 파업으로 대처하기에는 늦을 수 있다. 설비지원 노동자 일부가 사측의 회유·협박 속에서 전적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 큰 이타일이 생기기 전에 점거 농성에 돌입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활동가들과 사내하청지회·일반직지회 등이 투쟁 구축을 위해 결성한 ‘현상공동투쟁위원회’는 분사화·임금삭감 반대와 함께 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조선업은 정규직의 2~3배에 이르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조직돼 있지 못하다. 조직된 정규직이 동료 비정규직의 고통에 반대해야 한다. 이는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 하락 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공격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임금체계 개편을 들이밀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와 대졸 신규 사원의 초임 삭감 같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도 추진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모범”을 보여 이를 민간에도 확대하기 위함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정 임금체계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성과에 따라 대가(임금)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의 '개수 임금'(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생산량에 따라 치르는 임금)과 본질적으로 같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개수 임금에서는 “이 노동의 가격이 생산자의 작업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외관”에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의 형태상의 차이가 “임금의 본질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과급제 임금형태는 시간급제 임금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데,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분 임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임금형태가 무엇이든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과급제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마르크스는 개수 임금이 결과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의 형태 자체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개수 임금

우선 개수 임금은 일정한 수준의 노동의 질을 노동자에게 요구한다. 노동자가 완전한 보수를 받으려면 그 생산물이 평균적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임금 형태는 “자본가에 의한 임금삭감과 속임수의 가장 풍부한 원천”이 된다. 미리 정해진 작업능력에 못 미치는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시간당 평균적 생산물의 양이 정해지므로 “성과급제 임금은 자본가들에게 노동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이때, 노동자가 자기의 능력을 많이 발휘할수록 자신에게 이롭다고 여기므로, “이것이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의 표준강도를 더욱 쉽게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노동자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시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완전히 '정당한' 일이다.

에서는 노동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강도 강화를 위해 성과급제 임금이 통례로 사용됐다. 보통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성과급 수준도 저하한다. 노동자들은 성과급 하락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야 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강도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성과급제는 개별 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노동자들 “상호간에 경쟁심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성과급제 임금은 개인의 임금을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이 평균 수준 자체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사용자들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총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해도 일부 노동자들이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커지면, 노동자들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경쟁이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동자들은 기존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 중 30퍼센트가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임금에 하향 압박을 가할 것이다.

게다가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 같은 '쉬운 해고' 도입과도 연결돼 노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제가 도입되면 다수가 해고 위협에 처하진 않지만, 저성과 낙인을 피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키워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압박할 것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도 낳는다.

이처럼 대공업의 질풍노도 시대, 특히 1797년부터 1815년까지 성과급제 임금도 노동일의 연장과 임금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됐다는 마르크스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성과급제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가가 노동의 가격을 인하기 위해 성과급 수준을 인하”하거나 “노동생산성 증대가 노동강도의 증대를 수반”할 때, 또 “노동자가 성과급제 임금의 외관을 진실이라 믿고 상품 판매 가격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하에 반항”하기 때문에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가 이미 시행된 사업장에서는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금융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음에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이를 되돌리려고 파업에 나서려 하는 것을 봐도, 성과연봉제 같은 착취 강화 시도에 노동자들이 느끼는 반발감은 상당하다.

그런데 노동운동 내에서 이처럼 성과 연봉제의 주된 피해인 임금 억제, 노동 강도 강화 효과를 반대 이유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매우 광범하다.

예컨대, 심상정 의원은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논란을 부
각해 민주주의(또는 헌법)를 지키는 투
쟁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불법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법률적 투쟁이나 더
민주당 같은 성과연봉제 반대에 불철
저한 야당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자
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칼자루를
국회로 넘기는 셈이니, 투쟁을 약화시
킬 수 있다.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직결되는 것이 핵심 문제라거나 성과연봉제의 진정한 목적은 노조 파괴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개인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퇴출제 도입과 노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결정돼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전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고 해서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위험을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성과 연봉제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성과연봉제 저지가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지키기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 듯하다.

끄임어는 투쟁 노동민회는 투쟁

이유가 무엇이든 성과연봉제만 분명하게 반대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성과연봉제의 주된 효과를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투쟁을 강화하는 데 약점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방어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운동 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정규직 양보론이 확대되는 것에도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노동운동 좌파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온건 개혁주의적 ‘여론’의 꿈무늬를 좇는 것이다.

또 다른 버전으로 “성과연봉제 지지라는 수세적이고 부분적인 전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방어 투쟁은 지지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흔히 경제적 요구를 둘러싼 투쟁은 협소한 부문의 이익을 지키는 투쟁일 뿐이라고 보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운동 좌파들이나 전투적 활동가들도 종종 이런 주장을 받아 들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임금격차·청년 실업 문제를 내세워 공공부문·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을 보면,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단지 해당 부문 노동자

들만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한 부분의 노동자들이 잘 싸워 임금을 올리면,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를 따라잡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때로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잘 조직된 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이끌어 왔다. 잘 조직된 부문조차 자신들의 임금 수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조직 또는 더 열악한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일차 단결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에 맞서는 것은 단지 협소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부문의 노동자가 단결해 싸우면 정치적 투쟁인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의 투쟁이기도 하다.

또 투쟁의 동학에서 보자면, 개별 노조들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저마다 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의 투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산별] 공동 투쟁을 이유로 파업 시기와 수준을 조율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종종 노조 상층 지도자들이 투쟁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투쟁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을 합리화하는 명분이기도 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파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투쟁적인 노동자들 속에서 이들의 요구를 굳건히 지지하며 투쟁을 확대해가야 한다.

또 이 속에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 계약에 맞서는 투쟁에도 발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맑시즘2016

노동자 운동 관련 워크숍

★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
— 주요 쟁점과 노동운동의 대응

7월 21일(목)~24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장호중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 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명을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한국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대폭 축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의 30퍼센트를, 광물자원공사는 1백여 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를 먼저 추진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민간 부문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재정 지출 삭감으로 부채를 줄여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연금 개악,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기능조정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과 부채의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한때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자원 개발’에 수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더니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조선업 등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나 전기·가스 판매 민간 개방 등 전력·가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규모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기업주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세계은행과 IMF, OECD, EU 등 ‘국제’ 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수준에서 이런 조치를 주도해 왔다.

딜레마

한국에서 전력·가스 민영화는 IMF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2년 발전 파업 등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의 폐해(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거기에서 미국의 중동 전쟁이 낳은 유가 폭등으로 전력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하자 투자 전망이 어두워졌고, 민영화는 일시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비슷한 문제로 거듭 좌절돼 왔다.

대규모 공공서비스 민영화 조치에는 늘 따라붙는 딜레마가 있다. 수익성



박근혜 정부는 유가하락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되자 처음엔 배당잔치를, 다음엔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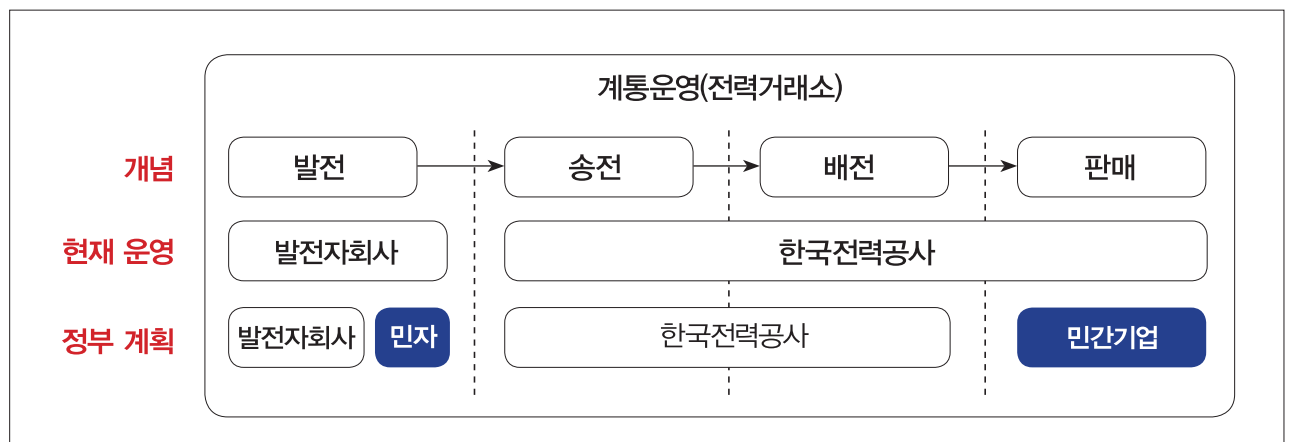
이 좋은 공기업은 잘 팔리겠지만 재정 수입이 줄어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수익성이 나쁜 공기업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체로 정부는 전자의 경우 정부 지분을 남겨 일정한 수입과 통제력을 유지하려 해 왔고, 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KT 민영화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뒤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얼마 안가서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 점에서 정부가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얇은 속임수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직후부터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보다 에너지 민영화가 뒤늦은 데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듯하다. 2012~13년까지만 해도 전력·가스의 적자와 부채는 커다란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반면,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유례 없을 정도로 컸다. 여러 부문에서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저항 능력이 여전히 만만찮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가 하락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한전은 역대 최대인 13조 4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고 발전 자회사들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이 돈으로 전기 요금 인하나 아니라 ‘배당 잔치’를 벌였다. 51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가 1조 원 가까이 받았고, JPMorgan 등 대규모 투자자들도 짭짤한 수입을 거뒀다.

적기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민영화의 적기라고 보는 듯하다. 한동안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특히 한전의 기능 중



전력 체계와 민영화 개념도: 판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려면 그동안 가격규제를 하던 전기요금을 시장가격에 맞춰야 할 것이다.

송·배전과 판매를 분리해 그중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판매 부문을 매각한다면 군침을 흘릴 자본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기 요금에 비해 발전 원가가 상당히 낮아진 만큼 당장 요금 인상 압력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 가격은 평균 kWh당 84.05원으로 전년(90.48원) 대비 7.1퍼센트 하락했다. 반면 각 가정에 판매한 전기의 판매 단가는 평균 kWh당 111.57원으로 전년(111.28원) 보다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의 전력 민영화 추진도 자극 요인이 된 듯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전력 소매 분야를 완전히 민간에 개방했는데(가격 전면 자유화는 2018~2020년) 통신 사업자 등이 이 부문에 뛰어들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보기에 한국은 2000년대 초에는 일본에 앞서 전력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지지부진한 사이에 일본에 뒤처진 셈이니 조바심을 낼 법하다. 당시에 추진한 민영화로 발전사와 송·배전(한전), 계통운영(전력거래소)을 분리하는 작업은 완료됐으므로 이제 도·소매를 한전에서 떼어내 민간에 넘기지만 하면 애당초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가스의 경우 소매는 이미 민영화됐

지만 ‘도입’ 즉,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민간에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를 시도했지만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여론 악화, 노동자들의 반발 등으로 좌절됐다. 오히려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가스 수입 계약 시기를 미루다가 가장 비싼 시기에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가스 수입은 10~20년 가까이 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 손실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 자체의 수익은 악화됐어도, 지금 진출하는 기업은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민간이 진출할 기회라고 여기는 듯하다.

수익성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전력·가스 민영화는 단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저유가에 힘입어 가격 인상은 조금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여기는 자본가들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면 요금 인상은 예정된 일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중단 같은 극단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 통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정부는 최소한 정보와 결정은 공개해야 하고 대중의 압력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이 명박 정부도 한전의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고집스럽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공공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무늬만 ‘공공’으로 남겨둔 채 민영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투자가·주주의 재산권이니 하는 이름으로 정부의 가격 조절 정책은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상실될 것이다. 즉 형식상 정부 소유로 남아 있는 부분도 시장 논리에 따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가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2014)

민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요금 인상뿐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혈안이 될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화력발전 정비, 핵발전소 설계, 국립공원 시설 관리 등도 민간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구의역 참사,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자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표가 승리하며 영국 국가, 지배계급, 경제, 정계가 혼돈에 휩싸였다.

투표율은 72퍼센트로 높았고 약 52퍼센트가 탈퇴에 투표했다. 국회의원의 4분의 3, 의회 내 3대 정당인 보수당·노동당·스코틀랜드국민당의 지도자들, 영국 기업인의 압도 다수, 영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주요 자본주의 기구가 거의 다 탈퇴에 반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유럽연합을 둘러싸고 보수당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잠재우려고 자신 있게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올 가을에 사퇴하게 됐다. 그리고 그의 당은 약화되고 분열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지난 30년 사이 최저치로 폭락했고 각국 시장은 요동쳤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는 미국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기능해(아 했지만 그리 잘하지는 못해) 온 유럽연합은 규모 2위의 회원국을 잃었다. 이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문제가 돼 온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보다 훨씬 파장이 큰 일이다.

이제는 스코틀랜드(따로 유럽연합에 남으려고 한다)의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이 일이 성사되면 영국 국가가 쪼개질 수도 있다.

항상 유럽 자본의 이익에 이바지하며, 그리스 민중을 긴축으로 내몰고,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의 노동자 공격을 지지하고,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를 맺으려 하고, 반대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해 온 신자유주의적 기구 유럽연합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받은 그 어떤 충격보다도 크다.

노동계급의 항의 투표

그런데 많은 영국 좌파들은 낙담한 분위기다. 그들은, 서유럽계 이민자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와 비서유럽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정서가 분출해 국민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탈퇴에 투표한 사람을 모두 인종차별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무엇



“우리는 난민을 환영한다” 유럽연합(EU)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이주민·난민 배척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6월 21일, 난민의 영국 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대.

보다 탈퇴 투표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나고 있다고 느낀 노동계급의 항의 투표였다. 숙련 노동자, 반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탈퇴에 투표했다. 반면 중간관리직, 고위 관리직, 전문직, 경영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는 43퍼센트만이 탈퇴에 투표했다. 아시아 출신자의 3분의 1, 흑인의 4분의 1이 탈퇴에 투표했다. [그러나] 세필드, 버밍엄, 브래드퍼드처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잉글랜드 북부의 대도시들에서는 탈퇴표가 많이 나왔다.

그중 많은 사람이 노동당 지지자다. 비민주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며, 불평등의 확산과 긴축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전혀 지켜 주지 않는 기구를 그들이 지켜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투표 기간에 부각된 인종차별 문제를 가버이 보자는 말이 아니다. 인종차별적 주장은 탈퇴파 진영에서 선명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탈퇴파 진영을 주도한 것은 이민자 반대 주장을 하는 영국독립당과 일부 보수당 정치인들이었다.

하지만 영국독립당 등은 지난 수년 동안 대중매체와 정치인들이 긴축에 대한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영국의 전쟁 참여를 정당화하려고 이민자를 공격하고 속죄양 삼아 온 것에서 세

력을 얻었다. 바로 잔류파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그런 일을 벌여 왔다.

올해 초 런던시장으로 당선한 노동당의 사디크 칸에 대해 무슬림혐오적 악선동을 한 것은 바로 캐머런이었다. 이민법을 매우 악독하게 개악한 것도 바로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였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민자에 반대하는 인종차별적 주장이 노동계급의 고통과 불만을 상징하는 것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좌파는 이민자가 문제라는 주장에 조금치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탈퇴에 투표한 사람들을 모두 무지몽매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보고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이 아니다.

좌파다운 좌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인종차별에 맞서는 투쟁과 노동계급의 조건을 공격하는 것에 맞선 투쟁을 연결시켜야 한다. 진정한 문제는 이민자가 아니라 권력 엘리트층과 기업주라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기회

그런데 인종차별적 우익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주류 정치인이나 유럽연합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기구들과도 운명을 같이하려는 태도로는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다. 유럽연합 같은 기구들은 실천에서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의 확산을 막는 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주류 정치권의 쇠퇴는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6월 26일 스페인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득표율은 합쳐서 50퍼센트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스에서는 전통적 양당 구도가 이미 해체됐다. 아일랜드에서는 3대 정당의 지지율이 2007년보다 25퍼센트 감소했다.

유럽연합 같은 기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영국독립당,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등의 것이 되도록 놔 두서는 안 된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이용해 유럽연합의 해체를 바라는 좌파적 주장이 유럽 전역에서 부활하도록 애써야 한다. 권력 엘리트층에 대한 반대 정서가 좌파적 색채를 띠도록 애써야 한다는 애기다.

영국의 좌파는 이 위기가 불러온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노동당의 좌파적 지도자인 제러미 코빈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아쉽게도 국민투표 기간에 코빈은 자신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유럽연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좌파적 유럽연합 탈퇴 주장의 영향력은 제한됐다. 기층 당원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지만 의원단 안에서는 고립돼 있는 코빈은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타협했다.

그래도 코빈은 노동당의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현행의 유럽연합을 용인하거나 캐머런과 함께 잔류투표 운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노동당 의원들은 코빈이 [잔류 선동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고, 그중 두 명은 코빈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코빈을 당 대표로 선임한다는 서명에 지금까지 15만 명이 참가했다. 이토록 노동당 우파의 어리석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캐머런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보수당의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텐데, 그는 선거로 당선한 것이 아니므로 긴축을 계속 추진할 권한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좌파는 단결해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긴축과 인종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재개해야 한다. 진보적 이유에서 잔류에 투표한 좌파도 함께 단결해야 한다.

영국이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패배해 풀이 죽은 자본가 계급과 정치인들이 주도할 것이다. 좌파가 단결해서 진취성을 발휘한다면, 사태를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415 호 / 번역 차승일

노동당 우파의 코빈 밀어내기는 좌절돼야 한다

노동당 우파가 국민투표 결과를 핑계 삼아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6월 24일 노동당 우파 성향의 의원 두 명이 노동당 의원단의 장에게 코빈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다.

6월 26일 노동당 예비내각의 외무장관 힐러리 벤은 코빈을 당대표로 더는 신임하지 않는다고 코빈에게 말했고, 코빈은 벤을 해임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장관들이 줄지어 사퇴하고 있다. 이 기사를 쓰는 28일 현재 노동당 의원

단이 곧 표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보수당은 분열했고, 패배 직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이 총리 자리를 놓고 다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집권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 코빈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노동당 우파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코빈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 7월 6일 이라크 전쟁에 관한 〈칠컷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인데, 이 보고서가 발행되면 노동당 전 대표이자 전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 노동당 우파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어떤 추악한 일을 벌였는지가 다시 회자될 것이다. 이미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세우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동당 우파의 코빈 불신임안 발의 분탕질은 전형적인 몰타기 시도다.

사실, 노동당 우파는 처음부터 코빈을 불신했다. 코빈을 당대표에서 몰아

내리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증언도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다.

노동당 우파의 코빈 제거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코빈 불신임안이 제출된 6월 24일 유나이티드노조의 렌 맥클러스키, 공공서비스노조의 데이브 프랜티스, 영국일반노조의 팀 로체 등 주요 노조 위원장 12명은 노동당 의원들에게 “이런 방종에 동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코빈은 노동당 의원단 안에서는 입지가 약하므로 기층 당원들의 힘에 기

대어 당내 우파의 반란에 대응해야 한다. 당내 우파에게 타협하는 것은 그들의 세력만 더 키워 줄 뿐이다.

더 중요하게는, 코빈은 긴축과 인종차별에 맞선 더 넓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며 그 운동의 힘에 기대야 할 것이다.

반갑게도, 6월 27일 저녁 런던 중심가에서 긴급히 열린 코빈 방어 시위에 1만 명이 모였다.

차승일

영국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차승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독립당 UKIP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독립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지지율이 3위인 정당으로 2015년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첫 국회의원 1명을 배출했다.

영국독립당은 부패하지 않은 반(反)제도권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 박은 정당이다.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런던 금융가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었다. 패라지는 대학생 때 보수당에 입당했다가, 1992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가입한 뒤 탈당했다.

지금은 탈퇴해 다른 당으로 옮겨지지만 2015년 총선 때 영국독립당에 선거자금 10만 파운드(약 1억 6천억 원)를 기부한 스튜어트 휠러 역시 보수당원 출신자로 금융기업가 출신이다. 그는 호화 사립학교인 이튼스쿨과 옥스포드대학교를 나왔다.

영국독립당은 이민자와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립당이라는 당명도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그러나 백인 노동자 편인 양 행세하는 것과 달리 영국독립당은 지독히 반노동자적이다. 영국독립당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감옥을 두 배로 늘리자.
-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하자.
- 그래머스쿨을 부활시키자.(한때 성적 좋은 학생들만 받았던, 그래서 많은 노동계급 가정의 학생들은 다니기 힘든 학교)

- 인권법을 폐지하자.(인권법은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법률로 고문 금지, 노예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3퍼센트의 단일세율제를 도입하자.(저임금 노동자든 대기업의 경영진이든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
- 동성 결혼 반대(“동성애자 중 극성스러운 극소수를 제외하면” 동성 결혼을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헛소리를 한다).

영국독립당은 유럽의 여러 극우 정당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중에는 이탈리아의 북부동맹이 있다. 북부동맹 당원들은 2011년 68명을 총으로 쏘 살해한 노르웨이 파시스트 살인마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독립당의 일부 당원은 영국국민당 BNP 같은 나치 정당의 당원이었고, 여전히 연계를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다. 하지만 영국독립당 자체가 파시스트 정당인 것은 아니다. 즉, 민주주의와 노동계급 조직 파괴를 지향하는 정당은 아니다. 그보다는 주류 정치권으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주류 정치권이 더 우경화되기를 바라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다.

그래서 영국독립당이 성장할수록 우파 정당인 보수당의 걱정이 커진다.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에 회의적이며 보수당을 더 우경화시키고자 하는 보수당 내 민족주의자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도 전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 같은 보수당의 주요 인물들이 영국독립당과 함께 탈퇴 운동을 벌였다.

장해져 인종차별적 의제를 더 강하게 주장했다.

더 근본에는, 주류 양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이 둘 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노동자를 공격하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진 상황이 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좌파적으로 표현하는 세력이 없다면,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독립당이 득을 볼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 각국에 긴축을 강요해 곳곳에서 반감을 사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을 영국독립당 같은 우익만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주류 정치인들이 영국독립당의 성장을 도왔다

영국독립당은 1991년 소규모 초당적 조직인 ‘연방주의 반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가 1993년에 현재의 당명으로 바꿨다. 1991년 총선 때만 해도 영국독립당은 0.02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하는 군소정당이었다.

이런 영국독립당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류 정당들 덕택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이 벌인 전쟁을 지지한 보수당·노동당 정치인들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무슬림혐오를 부추겼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이민자와 무슬림들에게 전가하려고 인종차별을 더 부추겼다. 그럴수록 영국독립당은 더 기고만

누가 영국독립당에 투표하나?

2015년 총선에서 영국독립당은 약 3백90만 표(12.6퍼센트)를 득표했고 현재 당원은 약 4만 7천 명이다.

영국독립당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보수 언론인 <선>과 <데일리 메일>을 더 많이 구독한다.

영국독립당 지지자의 거의 절반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영국독립당 지지자 중 29세 이하 청년은 8퍼센트밖에 안 된다.

영국독립당 지지자의 84퍼센트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김종조/사진

긴축 강요·민주주의 무시·난민 탄압·중동 폭격 유럽연합(EU)이 잘하는 것들.

브렉시트에 대한 다른 관측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

김종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세계 자본주의에 끼칠 영향은 상당하다. 당장,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이 공들인 ‘국제 질서’에 중요한 교란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자신들의 핵심 기구의 하나인 유럽연합에서 경제력 2위(세계 5위), 군사력 1위의 영국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노자 씨(이하 존칭 생략)가 ‘유럽연합에 잔류하든 탈퇴하든 영국이 자본주의이기는 매한가지’라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회피적이고 무기력한 반응일 뿐이다. 박노자는 우리가 ‘영국 본사’의 지시대로 말한다고 주장하는데, 미안하지만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 발표는 우리가 먼저 했다. 박노자 견해들의 한국 내 지지자들과 박노자의 관계는 민주적이고 우리와 영국 자매들과의 관계는 비민주적이라고 보는 박노자의 근거는 무엇인가? 좌파인 척하는 박노자를 어떻게 <한겨레>가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주류 언론은 브렉시트를 두고 유럽연합 탈퇴 요구가 다른 회원국으로 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영국의 수백 년 된 고립의 전통’이라거나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 탓’이라는 터무니 없는 논평 일색이다. 영국의 수백 년 된 전통과 대영제국 하에서 일어난 일은 청교도 혁명, 수평파와 디거스, 차티스트 노동자 투쟁, 노동대불안 등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이었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그렇다 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중주의 언론 <한겨레>가 전하는 메시지가 지독히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점이다. 요약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력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지도 못한 채 유럽 통합의 꿈을 망쳐놨다’는 것이다. 1년 넘게 진행된 논쟁 속에 투표에 참가한 영국 노동계급 다수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청명파니 같다.

주류 언론은 정작 이번 국민투표의 쟁점이 된 **유럽연합의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지의 지배자들이 벌일 협상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분석을 따라가면 평범한 사람들은 기뻐

하거나 울 수는 있어도, 향후 사태 전개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직면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국민투표 양 진영을 주도한 이런저런 정당들과 그들의 의도로 시야를 좁힌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이 모종의 진보적 국제 기구라고 착각해서 브렉시트를 ‘구 시대적 민족주의’, ‘신고립주의’로 여긴다. 그러나 **‘어느 계급의 국제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고 외쳤을 때 그는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를 말한 것이지, IMF나 세계은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UN 같은 지배자들의 ‘국제주의’가 아니었다. (자본가 계급은 국민국가가 별로 분리돼 있어서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일 수 없다.)

유럽연합은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도구다(본지 154호 ‘유럽연합의 역사 —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참고). 그래서 유럽연합은 IMF·세계은행과 함께 이른바 ‘트로이카’로 불리며 유럽 각국에 긴축을 강요하고, 시리아 등 중동에 미사일을 퍼붓고, 국경들에 장벽을 세우고 군함을 띄워 난민 유입을 차단한다.

원인 제공자

바로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우익 포퓰리즘이 온갖 형태로 기승을 부릴 조건들이 조성된다. 유럽연합은 오늘날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는 인종차별과 우익 포퓰리즘들의 해결책이기는 커녕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좌파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우익 포퓰리즘이 ‘노동자들을 포획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번 투표에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활약은 두드러졌고, 이는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성격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당한 반감이 누적·표출됐다는 것을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투표 기간에 잔류 진영에 속한 노동운동 지도자와 좌파들이, 이주민·난민을 탓하며 긴축을 자행해 온 보수당 지도자들과 무원칙하게 손잡고 ‘영국은 유럽 연합 안에서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다닌 것은 몹시 나쁜 효과를 냈다. 유럽연합에 대한 정당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아말로

유럽연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영국독립당(UKIP) 같은 우익 세력에게 떠미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독립당 같은 세력이 이를 이용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대한 정당한 반감이 커지는 것은 좌파가 성장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 결과는 약 1년 전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의 긴축안 반대(OXI) 표가 더 많이 나왔던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고, 유럽연합에 대한 금기를 찼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인상적이다. 실제로,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SEK)은 “유럽연합이 영국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가 긴축과 난민 거부에 맞서 싸울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반겼다.

유럽에서 특히 빠르게 진행 중인 **정치적 양극화**가 이번 투표에 반영됐다는 것이 더 온전한 설명이다. 개혁주의자들은 — 주류든 좌파적 형태든 — 바로 이 양극화를 통합하려고 무원칙하게 후퇴와 타협을 했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 과정은 투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심지어 투표 결과가 잔류였더라도 그 점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공산당(CPB) 등의 급진좌파들은 처음부터 국민투표 이후에 벌어질 정치 투쟁을 염두에 두고 탈퇴 투표 독려에 나섰던 것이다. 보수당의 탈퇴파나 영국독립당과 함께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으로 그들을 반박하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혁명적 비판과 극우 세력에 대한 비판을 결합시키는 캠페인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영국에서 우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하지만, 그런 미래는 결코 예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측의 진정한 문제는 능동적·개입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작용한 계급적 반감이 향후 사태 전개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그런 동역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현실을 바꾸려는 좌파의 개입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한국의 지배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우리도 이런 능동적 개입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김지윤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인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철근 물량이 2백78톤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미디어오늘〉이 의혹을 제기한 뒤에도 정부는 그동안 철저히 무시로 일관해 왔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주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제주 해군기지'였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 정부의 직접 책임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는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게 나중이라도 드러난다면 정권에 큰 파국이 올 수 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세월호에 과적됐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그간 지적된 무책임성과 진실 은폐, 규제 완화, 부패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책임이 정부에 일부(어쩌면 대부분)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특히 이들 철근 가운데 [선상 갑판에 실린] 1백30톤가량은 ... 세월호의 침몰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미 군사 동맹의 주요 프로젝트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에 깊숙이 개입했을 수 있다.

평형수 빼고 실은 철근

2014년 검찰 조사에서도 부실한 화물 고박과 과적이 침몰의 중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4년 4월15일 세월호는 오후 1시경부터 화물과 차량 적재를 시작했다.

이날도 청해진해운은 화물 선적 의뢰를 출항 직전까지 받았다. 화물 적재의 계획은 없고 오로지 "좀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제대로 고박하면 짐을 더 실을 수 없으니 허술하게 고박이 이뤄졌던 것이다. 세월호의 정식 선장은 운항관리자에게 "규정대로 화물을 싣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1등 항해사는 "그날은 철근과 H빔을 너무 많이 실었다"고 진술했다. 보통은 트럭 여덟 대 분량을 싣는데 4월 15일은 무려 열세 대 분량을 싣었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 직원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진술을 했다. "세월호 선수에 ... 무거운 철근 같은 자재를 ... 너무 많이 실어 밸런스(선체 균형)에 문제가 있

다는 말이 있었다 ... 하지만 회사의 수입 70~80퍼센트 정도를 담당하는 물류팀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라며 무시했다고 한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고 침몰한 원인이 배의 복원성이 크게 나뒀던 탓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갔는데도 화물을 싣느라 평형수를 뺐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급격히 한 쪽으로 쏠린 것으로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합동수사본부가 제출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가 침몰 초기 15~20도가량 기울었다고 한다. 횡경사 20도까지는 아직 세월호가 완전히 복원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배가 20도가량 기울어지자 선상 갑판에 2단으로 쌓여 있던 컨테이너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쏠린 화물들 탓에 배는 침수한계선을 넘길 정도로 기울어진 것이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화물량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화물 과적이 침몰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음을 직감해서였을 것이다. 이 위험한 운항의 배경에는 이윤 추구가 있었다. 무리한 증·개축으로 배의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평형수를 더 넣어야 했지만 화물을 많이 싣는 것을 우선해 오히려 평형수를 뺐다. 그리고 그 화물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과 H빔이 있었다.

이쯤 되면 정부는 과적을 방지한 수 준이 아니라 지시했을 공산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세월호가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는 유일한 선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개연성은 더욱 커진다.

이토록 무리한 과적과 악천후 속에서 도 운항을 강행한 데에는 촉박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한이 작용했을 듯하다. 이미 해군기지의 공사 기간은 1년 2개월가량 늦어진 상태였다. 심지어 이 때문에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빨리 건설을 자재를 운반하라는 압력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청소년인 무고한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망시줄2016
세월호 참사 관련 워크숍

- ★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 ★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운동
- 정책과 과제
- ★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7월 21일(목)~24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웹사이트(www.maxism.org)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서진웅/해군

“해적기지”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아시아 패권 정책에 협조할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여객선을 위험으로 몰아 넣고도 이를 감춰 왔다.



윤정호/청문회

구조 외면 그들은 아마 여객선 승객들보다 유실된 철근을 더 걱정했을 것이다.

안보와 안전 — 누구의 안보와 안전인가?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MD의 일환이다. 러시아가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배치에 나서고, 이란과 중국도 MD에 맞설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는데 MD는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가 대중국 견제 정책에 이용된다면 미중 갈등으로 불안정이 증폭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가 2011년 공개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벌금 폭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며 강행돼 왔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의 남부와 한국의 제주도에도 전략적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는 한미동맹을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받침대”라고까지 부르며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올해 초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며 한미일 동맹 강화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전력이 더 커지길 원하고 이에 발맞춰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사들이는 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킬체인 등 위험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지 미국 지배계급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다.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자신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

를 높이고 싶어 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더 유리한 자본 축적 조건을 조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고 때때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조위 예산과 인양 예산은 아까워하는 박근혜가 킬체인 등 무기 구입에는 수조 원을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마다 값비싼 무기를 사들이는 박근혜 정부는 수난구호법 개정을 통해 구조 업무를 민영화하고 구조에 쓰일 예산도 삭감했다. 안보 강화는 평범한 다수의 안전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제국주의에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김지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박근혜가 특조위 활동 종료에 그토록 혈안인 게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라는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활동 시작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못 박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측 합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이틀 날 경찰이 차압막도 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하더니 급기야 유가족 네 명을 연행해 갔다. 유가족 농성이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진실 밝기를 폭로하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삭발, 단식, 노숙 농성 등 한 해 본 것이 없는 유가족들이 다시 차가운 바닥에 눕게 됐다. 그 사이에 구조 방기의 책임을 져야 할 해경 간부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했다.

특조위 강제 종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높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온갖 꾀수안을 내놔 놓고 있다.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새누리당이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 폭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의혹과 맞물리며 더 큰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 조사 활동은 종료하고 선체 조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조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은 세월호 선체만이 아니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책임, 규제 완화, 왜곡 보도의 책임 등 매우 방대하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 잠수사 투입 과정 보도,



김민희/기자

적반하장 특조위 활동을 끝내고 인양을 미루고, 유가족들의 운동마저 탄압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항적도 조작 등 일부 사실을 들춰냈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 과정은 산적해 있다.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지시한 사항만도 2백31개에 이른다. 따라서 선체 조사 일부 보장이라는 알량한 꾀수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는 ‘보도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새누리당 이경현과 전 KBS사장 김환영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의 선장으로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끝까지 싸워 주기를 바란다.

아3당

총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패배한 뒤,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6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일정과 새누리당의 거부로 언제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월 24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다음 주 초에 반드시 열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6월 25일 범국민대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해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더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진지하다면 더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당도 내부 이견이 있어 정의당의 적절한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게다가 더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뺄 수 있다’던 자당 소속 농해수위원장 김영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않고, 당대표 김종인은 특별법 개정 지지 입장으로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려 있었고, 검찰이 이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선 안 된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요구했듯이, “성역 없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 밖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6월 25일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문화제에 1만여 명이 모여 여전한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보여 줬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우리가 만든 특조위를 지켜내자”(유정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고 호소했다. 감추려는 자의 공격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동자, 학생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

피해 지원 확대 법안이 상정되다

특별법 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피해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 개정 의결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과 함께 6월 20일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은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 재학생, 고교직원 등을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에 발벗고 나섰던 민간 잠수사 김판홍 씨의 죽음은 이 개정안 통과 여부와 절실한 지를 보여 준다. 고인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에 발 벗고 나섰고, 지난해 말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도 참석해 해경의 무책임한 현장 대응을 증언한 바 있다. 품 속에서 희생자들이 보인다면 그는 괴로움을

감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자원자들도 6월 8일 개정안 통과되면 그간 생생내기에 그친 지원에서 벗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피해와 희생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제대로 치료·보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의 죽음을 동료 잠수사 탓으로 돌리는 변변함까지 보였다.

정부는 학생들과 함께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승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전에 비정규직으로 받던 차별이 죽음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배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면 조항을 삭제하고 치유를 위한 기한도 완전히 때까지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생생내기에 그친 지원에서 벗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피해와 희생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제대로 치료·보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지난 6월 16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세 차례 실패 끝에 결국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선체는 갑판부 두 군데에 6~7미터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미수습자 아홉 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가슴에도 시커먼 멍이 들었다. 현재 정부는 선체의 최종 인양 시점을 8월 말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2015년 초 정부와 몇몇 여당 정치인들은 예산 문제를 들먹이며 유가족들로 하여금 인양을 단념케 하려고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는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인양 포기를 종용했다. 박근혜도 최근에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인양 과정을 보면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밀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에 근거해야 할 부력제 삽입 방식이 인양 도중에 갑자기 변경되는 등, 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5월 말부터 정부는 세월호 선수를 싣겨 들어선 채 아래 ‘리프팅 밥’(선체를 위로 올려주는 기계)을 삽입하는 공정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선체에 장착할 부력제(푼톤)가 계속 분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정상적인 인양 계획에 따르면 세월호 선수는 5도에 해당하는 10미터가 들려야 하는데, 이번 인양 과정에서는 2도에 해당하는 4미터밖에 들려지 않았는데도 와이어가 끊어졌다.

핵심 증거물

현재 정부가 ‘실종자’로 분류하고 있는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은 ‘충분한 수색이 이뤄졌는데도 실종 상태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에는 아직 수색되지 않은 격실과 화물칸이 있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시신이 이런 곳의 짐과 짐가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외에는 미수습자를 완전히 수색할 방법이 없다.

또한 침몰한 선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검찰이 침몰 원인으로 밝힌 ‘대각도 조타에 의한 급변침’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기각될 만큼 신뢰성을 잃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서 빠진 안 된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요구했듯이, “성역 없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 밖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6월 25일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문화제에 1만여 명이 모여 여전한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보여 줬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우리가 만든 특조위를 지켜내자”(유정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고 호소했다. 감추려는 자의 공격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동자, 학생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

시신 유실과 선체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배가 하루 빨리 인양돼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인양 작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적이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한 2차 청문회에서 해수부가 선체 조사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은 반면 선체 처리 계획은 이미 검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인양 업체(상하이셀비지)와 해수부 사이에는 한글 계약서조차 없으며, 인양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인양 실패를 고려한 재보험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니 유가족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수부가 철저히 비밀리에 인양 작업을 진행하자 유가족들은 침몰 현장 주변에서 먹고 자면서 작업을 감시했고, 잠잠한 바다 위를 보며 애통하는 속만 부여잡아야 했다.

정부는 선수 들기 작업을 7월 11일에 재실시하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다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배가 인양되기 전에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려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조사는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세월호 선체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은 ‘실종자’와 피해자 가족들뿐 아니라 진상 규명을 바라는 사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김승주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크게 줄었다. 2013년 10월 이래로 엮적락뒤치락해 온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 탄압이 이어진 분위기는 정작 대량 해고 시점에서의 충격을 무디게 하고 있다.

5월 중 전교조 시·도 지부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투쟁에 집중했다. 진보교육감들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진보의 원칙 훼손에 대한 전교조의 비판과 투쟁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해고 당사자들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전교조 죽이기’ 기획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던 바,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각 기관이 지은 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해고자들은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이자 몸통인 청와



전교조 창립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대에 부당 해고 철회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폭력 경찰이 이를 가로막으며 6명을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압박

이제 20대 국회가 열렸다. ‘여소야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대한 끈질긴 비판과 저항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전교조는 국회를 향

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부르주아의 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히 보장할 리 없다. 교원노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지려면 다각도의 대국회 압박이 필요하다.

현재 전교조 내부에서는 법 개정의 수준과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교사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악법인 교원노조법의 폐기와 일반노조법 개정 및 적용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노조법을 뜯어고쳐 그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은 지속 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국대의원대회는 교원노조법 폐기가 아닌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기본 방도를 결정했다.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등에 대해 노조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등 최대 수준의 요구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과제와 결부해 보면 논란 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노동3권 못지 않게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제는 교원노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정치 관련 법률들과 얽혀 있다. 전교조는 외국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수준과 내용을 조만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만일 상반기 중 국회에서 법안 제출이나 이에 대한 확약이 없을 경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욱 가열찬 투쟁을 배치하게 될 것이다.

정권에 의해 전교조가 다시 법외로 밀려나고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정권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패배한 것

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교조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라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가진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또 한번 여지없이 폭로하며, 교사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본전치기 수준을 넘어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창 시절 기억 속 어두웠던 교육 현실을 떨치고자 전교조 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은 그 자체로 ‘변증법적 청출어람’의 표상이다. 오늘의 위기 상황을 ‘변증법적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면, 우리 모두 더 높은 자신감으로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각종 공문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름 앞에 꼬박꼬박 ‘소위’를 반복해 붙이고 있다. 이 모욕적인 언어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아버지가 일본군 소위였던 대통령의 정치 폭력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이제 저들의 조롱에 대해 우리의 투쟁으로 답할 때다. 교사와 공무원이 ‘소위 계급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장’을 달고 정권과 한판 붙을 것이다. 1989년 닫힌 교문을 열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의 씨앗을 뿌린 전교조는 2016년 청와대와 정부의 닫힌 철문을 열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민중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풍을 불어넣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장호중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아지고 이 때문에 또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 중 55~77퍼센트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노동강도 때문에 과로사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반면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절반은 직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병원 인력을 늘리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조처는 법정 기준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강도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임금 탓에 지금도 해마다 새로 배출되는 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대형 병원에 집중되고,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들

은 법정 인력 기준도 못 채우기 일쑤다. 장기 근속 유인도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도 인력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요구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은 지금의 인력 부족과 인력 불균형, 노동강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인력 확충 요구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음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비극적으로 입증됐다. 밀집해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유가족 자신이 2차, 3차 감염인이 된 경우도 많았다. 노동자들을 흡사시켜 부와 권력을 키워 온 병원 소유주들과 법인 이사들,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대기업과 정부 관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몇 달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여론의 반발에 떠밀려 인력 확충 계획을 일부 내용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확대 시행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는 가족들이 간병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호 인력을 늘리는 제도다.

예컨대 지금은 근무시간 중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10~12명, 종합병원 10~16명, 병원 24명 정도다.(사회공공연구소) 이래서는 제대로 된 간호는 커녕 의료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를 각각 7명, 8~12명, 10~14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들의 업무를 도울 간호조무사와 병동도우미도 일정 기준 인원을 채우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비슷한 기준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실시해 봤더니 이 정도 인력 확충만으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한 병동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국립대병원들도 여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환자 만족도도 높은 만큼 몇 년 안에 널리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인력으로는 간병 업무(식사 보조, 화장실 및 배변 보조, 각종 위생 조처 등)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전체 병동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한 서울의료원의 경험을 보면 인력이

일부 충원됐음에도 새로 늘어난 업무가 많아 노동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존 병동 시설이,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된 구조다 보니 늘어난 인력만큼 효율성이 높아지지도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따라서 인력 기준을 훨씬 높이고 시설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서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 기준을 각각 4명, 6~7명, 10~12명으로 줄이고 간호조무사와 병동도우미도 현행 기준의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4~5명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 종합병원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모두 지지할 만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 할 듯하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이나 쌓여 있지만 정부는 올해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를 위해 고작 2천억 원가량만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인력 확충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환자들과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 뻔하다. 인력 기준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단순히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본인부담금도 늘어난다. 현행 간병비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지만 그럼에도 이 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줄이려 하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고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기업주와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더욱 옥죄려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은 명백히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막아내야 할 뿐 아니라 각 병원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발휘할 때 정부는 물론이고 병원 측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강동훈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회자료집에서 전략 투쟁 의제의 하나로 “재벌체제 극복”을 제안했다. 이 자료집은 재벌체제 때문에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불평등 심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즉, “기업 부분 간 양극화는 한국 경제가 재벌대기업(대자본) 중심으로 굳어진 결과이자,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경제 위기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찾지 않고 자본의 특정 조직 형태나 소유 구조(특히 재벌)에서 찾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다. 세계 각국에는 미국식, 일본식, 독일식 등의 서로 다른 기업 소유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 경제들 모두가 위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밝혔듯이, 최근의 경제 위기는 1970년대부터 분명해진 이윤율 하락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등 확대는 전 세계 지배자들이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노동계급을 대대적으로 공격해 온 결과이다. 다시 말해, 저성장과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 체제의 한 부분인 한국 경제의 정점에 재벌(대기업 집단)이 있다. 재벌 총수들은 소액주주들을 등쳐먹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늘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본질은 재벌이 국가 관료들은 물론 중소기업주들과도 합심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것에 있다.

소유 구조 개혁?

둘째, 이처럼 재벌의 소유 구조를 주된 문제로 보는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 정책 실현”을 주요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재벌 세습 타파, 출자총액제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계열·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 재벌 규율을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 등은 이러한 방향을 향하는 각론적 과제들이다.

민주노총의 이런 요구들은 그동안 재벌개혁론을 주장해 온 NGO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 온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총수 경영과 ‘문어발’ 사업 확장을 저지하고 개별 회사나 기업집단의 주주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재벌개혁론자들은 민영화된 KT를 모범적인 기업 소유 구조의 사례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KT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라 노동자 수만 명을 해고했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실

적 압박으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재벌개혁론을 내세운 NGO들이 펼친 소액주주 운동(주주행동주의)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들도 사실상 주식시장의 큰손들과 외국계 펀드들이다.

기업 소유 구조 개혁을 추구하는 재벌개혁은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노동자들에게는 득이 될 게 없다. 단적으로 말해, 재벌 개혁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재벌 총수 일가 수백 명이 갖고 있는 권력을 금융 자산가 수만 명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

셋째, 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노동자 경영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자유주의적 재벌 개혁이 결국 “재벌과 외국자본의 교묘한 동맹이었다”고 비판하고, “소액주주, 채권자, 노동자, 하청 중소기업, 소비자, 지역 사회” 등의 권익이 보장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이사회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도 재벌 통제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식 모델이 경영 참여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독일에서조차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한다. “독일의 경영이사회는 주주와 노조 측 추천 이사 10명씩으로 동등하게 구성된 듯 보이지만, 노조 대표 중 1명은 경영진 급이고, 주주가 선임하는 위원장은 2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독일도 정책 결정자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독일 환경단체 BUND의 교통정책과장 베르너 레)

실제로 노동자 경영 참여는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조건이 대폭 악화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 오늘날 독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22퍼센트로 급격히 늘었다.

실사 노조가 기업 경영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영 참여는 계급 협력 정치를 강화해 노동자를 분열시킨다. 기업이 아무리 ‘투명 경영’을 하더라도 경쟁의 압력은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정리해고를 하도록 만든다. 이때 노동자 경영 참여는 의도의 선함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른 노동자들이 승인하도록 압박하는 구실을 한다.

넷째, 재벌 개혁 운동은 비(非)재벌 자본과의 연대라는 뜻으로 노동자들을 이끌어 십상이다. 사실, 재벌개혁 요구는 재벌 같은 독과점이 없다면 시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흔히 중소기업 지원 요구와 함께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노동계급의 투쟁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못되게 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최저임



재벌 개혁 요구는 비(非) 재벌 자본과의 연대라는 뜻으로 노동자들을 이끌어 투쟁에 악영향을 준다.

금 결정을 코앞에 둔 지난 6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기업주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주들도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주요 과제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 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등을 달성하려면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싸워야만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주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금속노조가 올해 주요 요구로 채택한 “재벌의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도 위험하다. 물론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재벌의 초과이익을 하청기업과 공유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하청기업이 받는 이익의 50퍼센트 이상을 임금 인상과 복지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하청기업주를 지원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대기업 원청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만 낳을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삭감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하청기업주와 하청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대기업주와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같다는 논리로 미끌어질 수 있다.

기업주와 정부는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원하청 노동자들을 이간질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는 것은 원청 노동자의 임금이 높



재벌을 공격할 가장 큰 힘은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있다.

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다면서 말이다.

따라서 대안은 중소기업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포퓰리즘

다섯째, 위에서 언급된 이 모든 요인들 때문에, 민주노총이 ‘재벌 개혁’ 요구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행동을 고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론전에서 대재벌을 이기기 힘들다. 눈앞의 임금보다 장기 전망과 방안을 세우고 조합원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 박유기 지부장도 한 토론회에서 임금 인상을 내세워서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에서] 우리 임금을 앞세웠다가는 교섭은 시작도 못 해 보고 끝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측의 임금 동결 요구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생활조건이 공격받는데도 단호하게 파업을 지지하지 않고, 재벌 개혁을 내세워 국민적 호평을 얻으려는 것은 계급을 초월한 포퓰리즘(민중주의; 인민주의)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중

소상인, NGO(그리고 더민주당 개혁파)의 지지를 얻는 데 집중하느라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들을 당당히 제출하는 것을 주저하는 초(탈)계급적 민중운동은 재벌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재벌의 이윤뿐 아니라 장차 소유권까지 공격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재벌과 그 하청기업에 고용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현실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임금 삭감을 위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부문을 가리지 말고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잘 조직돼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재벌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에 고무받아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투쟁에 나서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맑시즘2016

노동자 운동 관련 워크숍

★ 재벌 개혁과 노동운동

7월 21일(목)~24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김영익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가나긴 대선 경선 레이스 끝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당당의 대선 후보로 정리됐다. 그러나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든 그는 오바마가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8년 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패배와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도력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는 세계 주요 지역(북미, 서유럽, 동아시아, 중동)을 모두 포괄하는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여러 곳에서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며 어느 한 곳에서도 만족할 만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중

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곳곳에서 불거지는 지정학적 도전을 다뤄야 했다(동아시아의 중국, 중동의 아이시스,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은 미국 유력 대선 주자들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곳곳의 지정학적 도전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의 충성을 유지하며, 앞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미국의 두 대선 후보들은 자신이야말로 이 물음에 적절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억압받는 민중들과 노동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클린턴과 트럼프가 제시하는 대외정책은 모두 끔찍하다. 둘 다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을 공언하는 제국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중동 민중을 더 고통스럽게 할 자들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미국의 중동 개입을 지지해 왔다.

뱃속 깊이 매파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은 분명 매파다. 그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내릴 결정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직 시절 행보를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새로운 대외정책 마련을 주도했다. 클린턴은 2011년 11월 <포린 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것은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대표하는 문서로 꼽힌다.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그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고

자 한다.” 이 글에서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가 왜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며 옹호했다.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클린턴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해 동맹을 규합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특히, 클린턴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적극 관여하며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국가들에 접근했다. 예컨대 2010년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에서 클린턴은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북한을 대할 때는 핵을 먼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클린턴은 ‘미국의 태평양 세기’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아시아의 성장과 역동성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사진 출처: Lorie Shafer (블리키)

적 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 개방된 아시아 시장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투자와 무역 기회와 첨단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클린턴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공세적 자유무역 정책을 주도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민영화, 규제 완화 등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클린턴은 군사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클린턴은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서해에 배치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의 코앞에 항공모함을 들이대겠다는 것이었다.

리비아

중동 민중에게는 훨씬 끔찍한 재앙을 선사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이렇게 말했다. “[클린턴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를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추진 세력이었다. 그런데 지금 리비아는 완전히 엉망인 상태가 됐다.” 클린턴이 관여한 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리비아 혁명은 힘을 잃었고 리비아에서는 혼란이 거듭됐다.

그 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파나 시리아 개입 등 클린턴은 직접·간접으로 군사력을 휘두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클린턴의 대선 캠프에는 전 국방장

관 레온 파네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토마스 도널런 등 오바마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 클린턴이 당선하면, 그 정부는 대외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정부 3기’가 될 공산이 크다.

6월 2일 클린턴은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밝히며, 군사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 제국주의가 다른 경쟁국(중국, 러시아 등)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요소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과의 협력이 주는 이점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함께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있고, 6월에는 세 나라 군대가 함께 MD를 테스트하는 합동 훈련도 벌인다고 밝혔다.

클린턴이 집권한 후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어떤 대외정책을 펼칠지 능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대통령 클린턴도 국무장관 클린턴 못지 않게 한반도 불안정의 악재가 될 게 분명하다.

트럼프가 고립주의 노선이라는 오해

많은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외정책을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의 차이로 설명한다. 트럼프가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며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기를 요구하는 고립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방위 제공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한때 ‘나토(NATO)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주류가 반발할 만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일부 발언만 보고 그의 대외정책을 고립주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다른 면모도 눈여겨 봐야 한다.

트럼프는 한 연설에서 20세기 초 미

국의 필리핀 침공 당시 미군의 존 퍼싱 장군이 “무슬림 폭도 50명”을 잡아서 돼지 피를 묻힌 총알로 그들을 학살한 것이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좋은 처방이었다고 떠들었다.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고(지금은 뉘앙스를 달리해서 말하지만),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시스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발언은 그가 고립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 호전성에 오히려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미국은 지상 최고의 무기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구입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도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난 4월 트럼프는 좀 더 정제된 형태로 자신의 대외정책을 소개하는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의 몇몇 대목만 봐도 그가 고립주의자라기보다는 매우



사진 출처: Gage Skidmore (블리키)

공세적인 제국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한 것을 “재앙적”이라고 비난하고, 오바마가 체코와 폴란드 등지에서 MD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급진 이슬람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3월에 한 연설에서는 중동에 지상군 3만 명을 파병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이 급격히 군사력을 키우는데 미국은 군비를 줄이고 있다며, 핵무기 현대화 등으로 군사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를 고립주의자라고 보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위협

오히려 트럼프의 언동은, 미국의 패권이 취약해지는 데 위기감을 느끼며 미국의 지위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태세가 된 미국 지배자들의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봐야 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외정책은 남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까닭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운운했지만,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들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역사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무임 승차”하지 말고 군비 부담을 더 늘리라는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비록 트럼프가 선정적 표현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일 뿐, 한국 등 동맹국들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짊어줘야 한다는 건 미국 지배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오히려 통일연구원의 우려가 들어맞을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대북정책에 있어서 군사력 사용과 강압적 수단을 선호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보다 북미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의 두 대선 후보들은 모두 철두철미 제국주의자이며, 국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민중들의 적이다. 둘 중에 누가 당선하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군사력 사용도 감행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경쟁 제국주의 국가(중국)를 제압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좌파는 제국주의의 문제를 주목하고, 제국주의의 위기에 대응할 반 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의 초석을 쌓아 나가야 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김영익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국정원은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정작 총선 직전에 탈북 사실을 공개해 종업원들을 노출시킨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을 하나원에 보내지도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종업원들을 장기간 구금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완전히 부당하다. 탈북 종업원들은 그렇게 수용돼 있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구금 상태에서 당장 벗어나 남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남이든 북이든 또는 제3국이든 자신이 살고자 하는 곳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문제는 이주와 왕래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남한 정부와 우익들은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역대 정부들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고 위선적으로 탈북민을 이용해 왔지만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대량 탈북 사태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만약 한국 정부의 중국 주재 대사관이 탈북민을 받아들이거나, 안전하게 입국할 길을 열어 준다면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한 정부가 탈북민의 이주 권리를 인정한다면 “기획 탈북”이나 국정원 등의 공작, 또는 브로커의 중간과 사기 등이 먹힐 여지가 없을 것이다. 브로커에 속아 원치 않게 남한으로 오게 돼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된 북한 주민 김련희 씨의 비극도 결국 남북한과 인접국 지배자들의 비정한 정책에서 비롯한다.

기본 인권

한편, 자민통계를 비롯한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남북(의 외교적) 관계 훼손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이들은 탈북민을 남한에 받아들이는 것이 남북 관계를 훼손한다고 여긴다.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 근거해 심지어 브로커 등이 탈북 과정에 관여하는 “기획 탈북” 자체가 사실상 “유인 납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북 종업원 13명 중에 자기 의사에 반해 남한으로 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이런 시각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은 탈북

민이 대부분 자신의 자주적 의사가 아니라 정부, 우익 단체, 브로커 등의 “기획”에 따라 “유인”돼 남한으로 왔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굶주림과 빈곤 등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이주자이고, 실질적인 난민들이다.

그러나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은 기획 탈북을 문제 삼고 이를 근절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기획 탈북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지 않은 채 이주와 왕래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중국·북한이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파가 탈북민들의 권리를 옹호할 때 지배자들의 위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위선

진정한 남북 교류와 협력은 남북 노동자와 보통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유대를 맺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협소하게 보고, 정작 이 근본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남북 간 자유 왕래 요구라는 맥락 속에 자리매김돼야 한다.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나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결국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데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남북 지배자들은 자유 왕래와 남북 주민 간 자유로운 접촉을 가로막아 왔다.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질 때도 남북 교류와 왕래는 철저히 남북 당국의 통제 하에 진행됐다.

지난 30년간 진보운동이 대부분 혁명적 경향에서 개혁주의적 경향으로 온건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진보진영 내에서 자유 왕래 요구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자민통계도 이 요구를 내세우지 않는다. 6·15 선언 등 남북 정부 간 합의의 지지도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급 동맹을 추구하다가 통일운동의 핵심 요구였던 자유 왕래가 후퇴한 듯하다.

그러나 자유 왕래는 남북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정세이더라도, 좌파적 강령과 전략이라면 자유 왕래를 제기해야 하고 탈북민에게 자유 왕래의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 왕래는 1948년의 UN인권선언에도 보장돼 있는 기본권 아닌가.

그리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탈북민 수용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점도 비판해야 한다. 우선, 수용 기간이 너무 길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최장 6개월, 그리고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잡아둘 수 있다. 수용 기간에는 변호인이나 가족·지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옛 서독 정부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을 통상 1~2주가량 수용하고 서독 내 정착지로 보낸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리고 긴 수용 기간에 가혹행위, 간첩 조작 등 국정원이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박근혜 정부가 공개한 탈북 종업원들의 모습.

많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나와 정착한 후에도 국가의 감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보안경찰이 “신변보호담당관” 자격으로 탈북민들을 관리한다. 보안경찰이 탈북민을 감시하는 건 정부가 탈북민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래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이 감시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신변보호 활동시 개인 사생활 감시, 개인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주장한다.]”(조동운·전병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위기관리 방안’,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이런 감시 속에서는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진보·좌파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국가의 감시와 통제로 자유를 제약받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폐지를 포함한 장기 수용 중단, 보안경찰이 맡는 신변보호담당관제 폐지 등도 요구해야 한다.

맑시즘2016

제국주의 관련 워크숍

★ ‘북한 정점, 어떻게 볼 것인가 — 핵과 미사일, 3대 세습, 인권, 시장 개혁

★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위기 — 김일성에서 김정성까지

7월 21일(목)~24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어떤 곳?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이름만 바꾼 곳이다.

합신센터는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다. 국정원이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위장 탈북 내지 간첩 여부를 조사한다. 이 합신센터의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탈북민은 하나원에 갈 수 있다. 국정원은 합신센터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탈북민을 구금해 조사하는데, 조사 과정에

서 각종 가혹 행위가 벌어져 왔다. ‘식사 시간 이외에는 쇠창살이 있는 독방에 머물러야 하고 화장실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자술서를 작성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탈북민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여러 사례들이 폭로됐다.

국정원이 탈북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아지자 최근 합신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당연히 그 본질이 달라지진 않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이현주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여성들은 명백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언제나 차별에 맞선 투쟁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려면 여성차별로 누가 득을 보는지, 누가 차별에 도전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양성분리적 여성주의자들과 다르게 이해한다.

후자는 여성차별에서 모든 남성들이 이득(또는 특권)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희진 씨는 모든 남성이 “가해자”라고까지 주장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급진여성주의자는 남성이라면 차별에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문제의 일부이고 여성차별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는 남성들이 “공기처럼 누려왔던 특권”에 대해 말한다. 최근 한 좌파 기관지도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성찰”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여성운동 내 다수가 받아들여 온 가부장제론의 핵심 아이디어다.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제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표현하는 한 방식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협력하고자 한다.

남성이 여성차별로 득을 본다는 생각은 여성차별이 삶의 곳곳에 뿌리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포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차별의 현상을 묘사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여성차별이 어디서 비롯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은 여성차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고, 여성차별에서 득을 보는 것은 지배계급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 큰 약점이다.

겉보기로, ‘남성 이득’ 주장은 이치에 맞는 듯이 보인다.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여성이 책임진다. 여성에게 성폭력·성희롱을 가하는 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남성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노동계급 소속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더 천대받는 처지에 있다는 말이 곧 모든 남성이 그런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것을 경험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듯이,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상 이면에서 작동하는 힘을 봐야 한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만약 사물의 현상과 본질이 같다면 과학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주들은 노동력 재생산 임무를 노동계급 가정에 떠넘김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한다.

여성차별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마르크스는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아일랜드계 인종차별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렇게 썼다. “[영국과 아일랜드 노동자 사이의] 이러한 적대 관계야말로 영국 노동계급이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다. 그것은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자본주의는 극소수의 자본가가 대다수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다. 자본가들은 다수인 노동계급을 성공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을 부추긴다. 노동계급의 분열은 지배계급에게 이득이고 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반대로 차별은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노동계급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차별을 유지하는 데에 노동계급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여성협회가 인류 역사의 기반”이라는 정희진 씨의 말과 달리, 여성차별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차별은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계급이 생겨나면서 함께 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주된 구실은 노동력 재생산이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는 집안에서의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의존한다. 게다가 노동계급이 가족 단위로 원자화되는 것은 사사화(私事化)와 개인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하는 이러한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이 여성 차별이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이유다.

자본주의는 노동력 재생산 임무를 개별 가정에 떠넘김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한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몽니를 보면, 지배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육아 후 노동시장 진입 시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시작한다(가령 시간제 일자리나 초단시간 일자리 등). 여기에 여성이 주부양자가 아니라는 이데올로기가 더해져 여성들은 열악한 조건도 감수하도록 강요받는다.

반대로 남성들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자로 여겨지는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가족 유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이 직장에서 쫓리

면 그의 가족 전체가 나라에 빠질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게 만들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가족제도가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동거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일자리와 임금, 승진 등에서 여성 노동자는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 여성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남녀 자본가에게는 확실한 이득을 안겨준다. 하지만 남성 노동자들이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지는 의심스럽다.

만약 여성의 저임금으로 남성노동자가 이득을 본다면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때 남성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8년~2008년 동안 한국의 여성과 남성 임금은 동반 등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임금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논의는 <노동자 연대> 157호에 최미진이 쓴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를 보시오.)

하향화 압력

또, 독일에서 미니잡 등 주로 여성들이 종사한 저임금층의 확산은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구실을 했다. 이는 한 부분의 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계급의 노동조건 하향화 압력으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 자본가라면,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든 없든,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썩 바뀌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임금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지 않겠는가?

여성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임금 삭감을 당하면, 그와 함께 사는 남성 노동자는 생계유지에 더 압박을 받고 가족 부양을 위해 더 긴 시간 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일시적으로 얼마간 이득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혜택조차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계급 전체로는 분열의 대가를 치러 노동자 전체에 해롭게 작용한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경쟁과 지배계급의 이간질 때문에 부분과 전체는 상충될 수 있다. 가령 공공부문의 공동 투쟁에서 어느 한 부문이 성과급을 받고 투쟁을 배신했다고 하자. 이는 당장에 해당 부문에게는 이득일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투쟁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일이다. 이는 향후 해당 부문의 이익을 지키는 데서도 불리한 조건이 된다.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을 보면, 여기서는 틀림없이 모든 남성이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가사노동에 4배가량의 시간을 더 쓴다(208분 : 47분).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은 매우 더디게 늘고 있다. 물론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가사와 육아는 더 동등하게 분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불평등 때문에 남성 노동자가 약간의 이득을 얻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개인들이 하는 구실을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구조와 작동 방식과 연결지어 보면,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비로소 드러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하는 주된 구실이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노동계급 가정 내에서 여성이 하는 무보수 노동은 개별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을 위한 것이다.

가사노동의 불평등에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남성들의 차별적 관념(상당수 여성도 이런 편견을 공유한다)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연인이나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흔히 남성 노동자들은 부양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여성 노동자보다 더 장시간 일하고 더 멀리 직장을 다닌다. 분명, 집안에서 ‘왕따’가 되길 원치 않을 많은 아버지들은 자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할 것이다.

가정 내에 불평등이 없거나,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자본주의 체제가 두 성 모두에 미치는 영향(흔히 파괴적 인을 놓치기 쉽다. 또한 가정 내 불평등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놓치기 마련이다. 바로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 말이다.

여성차별은 계급사회와 함께 등장했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착취와 자본축적의 필요 때문에 유지된다. 따라서 남성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더 나은 처지에 있고 어떤 이점을 누리든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차별을 반대하는 게 자신의 계급이익에 부합한다. 스스로 ‘노동자’라고 여기든 여기지 않든 객관적 실제(현실)가 노동자 여부를 규정하듯, 개별 남성 노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렇다.



김미경

계급적 차이

모든 남성이 여성차별에서 득을 보고 차별의 지속에 단일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남성 동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일부 여성주의자들도, 남성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성 역시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일부 남성들(자본가와 국가관료 등 지배계급 남성들)은 분명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 남성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반면 소수의 지배계급 여성들은 노동계급 남성들보다 비할 데 없이 큰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만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박근혜나 나경원, 최연혜, 김을동 같은 여성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 내 남성과 여성의 (성별)격차는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계급)격차에 비하면 훨씬 적다. 오히려 노동계급 남녀는 대부분의 시기에 자신의 삶

이든 사회 전체든 스스로 통제하기보다 자본가와 권력자들의 통제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계급적으로 높은 배경과 위치에 있는 여성이라고 해서 성차별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계급 남성의 일부가 여성에게 폭행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여성 차별적 편견을 받아들이고 일부가 억압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은 여성 차별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돼 개인 관계에까지 스며들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지, 노동계급 남성이 여성차별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성차별적 편견은 상당수 여성들도 받아들이나.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남성 권력”을 입증하려는 듯 모든 남성이 강간, 살해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양 말하지만, 이는 큰 과장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마치 어떤 노동자가 새누리당을 지지

하거나, 자신이 속한 노조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그의 계급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 차별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관념들의 집합을 ‘하위 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하위 의식은 변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아무리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이런 후진적 의식이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거나 정치적 경험을 하면 바뀔 수 있고 무엇보다 집단적 투쟁 경험 속에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남성 권력’이 문제라고 보는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차이점의 하나다.

모든 남성이 여성차별에서 이득을 얻느냐는 문제는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차별이 무엇에서 비롯했고, 왜 유지되며, 누구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전략문제다. 이런 점에서 계급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멈춰세울 잠재력이 있는 노동계급의 주요한 일부가 됐다.

권력과 특권: 여성차별의 근원에 대한 오해

여성차별에서 남성이 이득을 얻고 그 때문에 성차별이 유지된다는 견해는 차별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차별이 개인들의 관계에서 비롯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며 개인 관계 또는 한 부문과 다른 한 부문의 관계만 보게 만든다. 그러나 차별을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면 이런 파편적·경험주의적 인식 방법을 넘어서야 한다.

최근 여성주의 일각에서 유행하는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은 이런 인식 방법을 더욱 부추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사회는 단지 주체간(개인) 관계들의 총합이다. 차별은 착취 체제와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는 푸코의 말로 대표되는 이런 관점은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파편화할 위험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 맞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간단히 기각되기 쉽다. 파편화된 저항을 고무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는 근원적 여성주의의 구호와 쉽게 어울린다.

물론 근원적 여성주의자들도 성차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차별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조”는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구조와 물질적 조건과는 관련이 없다. 그들에게 “구조”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위계적 관계들’과 여기서 비롯한 차별 이데올로기(이른바 ‘여성혐오’)를 의미한다. 이런 “구조”는 “가부장제”나 “성별(젠더)권력 관계”, “비대칭적 위계 관계”, “성차별적 젠더 질서”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런 “구조”가 어디에서 비

롯하는지를 묻지 않기에 그들은 흔히 현실의 불평등을 묘사하는 데 그친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말이다.

한편, 구조적 성별 권력 관계가 일상을 지배한다는 주장은 인간이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존재라고 가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인간은 구조에 근거한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사회 전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변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이 사회를 개인들의 총합으로 여기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결합하면, 개인들의 행위는 흔히 ‘구조’로 환원되고, 또 개인들의 저항 행위는 ‘구조’에 저항하는 행위가 된다. 개인적 경험 말하기와 담론(일종의 성토 커뮤니티)이 넘쳐나는 이유다.

물론 차별적 경험 말하기는 차별 반대를 위한 좋은 출발점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은 차별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이해하고 과정을 설정하는 과정 속에 자리매김할 때 효과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차별은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지만, 차별에 맞서 싸우는 문제에서 계급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노동자 차지를 약화시켜 온 박근혜에 항의하는 여성노동자들.

해방의 전략: 누구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모든 남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본질적 문제라면, 그것의 논리적 결론은 남성들이 특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일 것이다.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과 일자리 지키기를 단념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득이 될까?

여성 차별이 착취 관계와는 관계없이 남성 특권에 의해 작동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시선을 계급 사회라는 진정한 적으로부터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든다. 계급투쟁은 여성해방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 오히려 여성해방이 남성 야단치기에 달려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 진정으로 여성 천대를 끝내기 위한 실천에서는 계급투쟁에 반대하거나 거리를 두게 된다.

“국가와 자본가 권력”과 “남성 권력” 모두 문제라는 주장도 상충하는 견해를 절충함으로써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라는 중요한 문제를 흐려 버리는 효과를 낸다.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은 1990년대 초에 사회 전체의 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이라는 전망을 잃어버렸고 그중 다수는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성평등을 이룬다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물론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여러 차별적 법과 제도가 개선됐고 이것은 사회 전체에 성평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종종 무력화되기도 했다. 여성차별의 물질적 조건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 공황 뒤에는 다수 여성들의 삶이 더욱 악화됐다. 여성운동은 이에 맞서려 했지만, 주류 여성주의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지했기에 효과적인 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의 괴리가 커졌고, 그런 괴리는 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에서 현격했다. “주류화된 페미니즘이 실제 여성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진보연대의 지적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평가이다.

차별적 말과 태도, 행동에 도전하는 일도 정당한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 이제 막 급진화된 젊은 여성주의자들은 법·제도 개선을 지지하면서도 일상에서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거대한 체계적 차별에 맞서는 투쟁이 주로 개인들의 언행이나 태도, 자기 성찰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흔히 생각이 크게 바뀌어야만 착취

와 차별에 맞선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흔하다.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이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이든 차별 반대 투쟁이든,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약간의 생각 변화와 여전히 크게 모순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 새로운 통찰을 얻고 낡은 관념과 편견이 깨지는 것은 바로 이런 투쟁 속에서다. 변화를 위한 투쟁 속에서는 자본주의에 의해 고무돼 온 견해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계급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계급이 착취 문제나 경제적 쟁점에만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차별에 맞서는 일이 노동계급 남녀 모두의 과제가 돼야 하고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런 일은 자동적인 게 아니다. 노동계급 다수는 지배계급이 퍼뜨리는 분열과 거짓말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계급과 싸울 뿐 아니라 계급 내부를 향해서도 정치적 논쟁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편의 일부도 근본적으로 차별 유지로 득을 본다는 이론과 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 반대 투쟁에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런 이론과 사상은 차별 반대에 동맹세력이 될 수 있는 노동계급 남성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어, 성차별 반대를 여성들만의 과제로 만드는 효과를 내기 쉽다.

또한 남성을 여성혐오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이 대중 운동 건설에 효과적일까? 성별 “정체성”에 따라 말할 자격을 주는 것은 차별·반대 운동의 전략·전술을 토론을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차별에 맞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음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는 여성차별이란 너무나 뿌리 깊어서 “그 무거운 흙덩이를 갈아엎으려면 아주 무거운 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을 성취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여성차별을 끝장내려면 여성차별에서 이익을 얻는 계급사회를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경제 위기 하에서는 개혁을 성취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성취해도 도로 빼앗기기가 쉽다.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힘을 가진 남녀 노동계급을 단결이 아니라 분열로 이끌 위험이 있는 사상이 아니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필요한 이유다.



건설노조

임금과 안전을 위해 파업하기로

박재순 건설노조 조합원

오는 7월 6일 전국의 건설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모인다. 덤프운전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목수, 철근공, 외선전기노동자 등 건설현장의 여러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임금·안전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임금(임대료) 체불

건설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 가운데 하나는 임금을 제때 달라는 것이다.

6월 초 남양주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 노동자들이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현장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수억 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임대료)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원청(대우조선해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해당 하청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굴삭기, 포장장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은 생활고 이상의 어려움을 안겨 준다. 당장 장비를 운용할 비용이 없으면 일거리를 두고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남양주 현장에서처럼 하청업체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원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은 2천4백87억 원이다. 건설노조 조사를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조합원들의 지난해 체불임금도 1백8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백77억 원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 공사에서 발생했다. 지금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부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정부·지자체가 발주, 관리·감독하는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정부가 이 지경이니 민간



임금체불, 산재, 노조 탄압 ... 언제까지 이렇게 살란 말인가.

기업들이 규정을 따를까?

건설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임금, 임대료 지급보증제도를 쟁취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정부가 말로만 하는 체불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한 현장

'안전사고 위험'도 고질적인 문제다. 1년에 6백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얼마 전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건설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회사가 안전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안타까워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하도급이 여전히 건설 현장에 만

연하다. 한 노조 활동가는 "심지어 3억 원짜리 공사가 10단계의 하도급을 거쳐서 3천만 원의 공사 비용으로 진행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하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안전'에 비용을 쓰지 않고, 노동자들을 닦달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을 끝내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혈안이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임시직 신호수들이 배치되다 보니 지반이 약한 곳을 구분하지 못한 채 건설기계를 인도하다가 전복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전봇대 공사를 하는 전기 노동자들은 작업 중 감전으로 팔다리를 잃고, 해마다 12~13명이 목숨을 잃는다. 최근에는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며 작업하는 환경 탓에 백혈병을 비롯한 암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할 것을 몇 년째 요구했지만, 한국전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고, 정부는 이를 묵인·방조해 왔다. 결국 거듭된 사고와 전국 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한국전력은 얼마 전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팔다리와 목숨은 되돌려 줄 수 없다.

정부가 '다단계하도급 근절', '전문 신호수 도입', '산재 사망 사고 처벌, 원청 책임 강화' 등 노동자들의 요구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안타까운 사고가 대폭 줄었을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 감시 활동을 공갈협박죄로 몰아 구속했다.

노조 공격

청년들이 건설 현장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위험이 상주하는 일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의 진정한 원인은 못본 채하며 오히려 안전문제를 앞장서 제기해 온 노동자들만 공격하고 있다.

최근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노조 공격에 대한 우려와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 공격에 눈이 벌개진 정부에게 그동안 민주노총 투쟁에 앞장서고, 해마다 대규모 상경 파업을 벌여 온 건설 노동자들이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건설노동자 1백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최근 타워크레인 분과에 대한 공격은 목수·철근공들이 소속된 토목건축분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 안전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건설노조의 조합원 우선 고용요구를 문제 삼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물론 노조가 조합원들만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노동자들 전체의 이익과 단결에 이로운지 노동자들 간에 토론하고 논쟁해 결정할 문제이지 고용 불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나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건설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조건을 이용해 끊임없이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해 온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공공 공사가 전체 건설 공사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따라서 정부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인데도 그간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제 와서 새삼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뻔한 속셈일 뿐이다.

상경 파업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을 분쇄하고 건설 현장을 바깥 법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7월 6일 상경 파업을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6월 20일부터 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 활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속한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에서도 20여 명이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올해 제대로 싸워보자는 분위기가 제법 높다. 건설노조의 18개 법제도 개선 요구안에는 체불과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퇴직공제부금 인상·확대 적용, 적정임금(임대료)제 도입, 직접시공 전면 도입 등 건설현장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여러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양보할 듯 말하다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두 개의 요구라도 확실하게 쟁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도 쟁의행위를 가결해서 7월 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5월부터 각 지역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벌여 온 토목건축분과 조합원들, 한국전력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온 전기분과 노동자들의 사기도 높아 보인다.

정부의 공격을 막고 요구를 쟁취하려면 이번 상경 파업 투쟁을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힘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이번에는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정부가 요구 수용을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16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6

7월 21일(목)~24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www.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이 밖에도 국내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2016에서

노동자 운동,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여성·성소수자 차별과 해방을 위한 투쟁, 정의당과 진보·좌파 정치, 제국주의 등 70여 개 주제로 연설합니다.

웹사이트에서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디스 오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이호중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